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4.

국 토 교 통 부
모빌리티총괄과

I. 과업 개요	1
II. 과업의 주요내용	2
III. 과업 추진계획	4
IV. 과업 수행지침	6
V. 보안대책	10
VI. 제안관련 일반사항	12
VII.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17
VIII. 평가방법 및 기준	19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방안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3. 용역비 : 80,000,000원(팔천만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의 배경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3.3)하여 ‘23.10월부터 시행될 예정

- 모빌리티법 제11조 등에 따라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필요

- 또한, 모빌리티법 제7조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모빌리티 혁신동력 확보 및 법 시행 시점(개월後, '23.10 예상)을 고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필요

II 과업의 주요내용

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정립

○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근거, 주체, 대상범위 등 조사

- 규제샌드박스 신청사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의 사업내용, 예산
지원현황, 보험가입, 배상범위 등 세부조사

- 타 법에 따른 규제특례 위원회 종류 및 운영 현황 조사

○ 사례 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 도출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사례 분석을 통한 대상범위 도출

- 모빌리티 관련 법령* 규제샌드박스 신청사례 분석 및 연계방안 도출

* 자율주행자동차법, 스마트도시법 등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체계 마련

- 규제샌드박스 규모·기간 등 대상범위 기준 정립

-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급 등 소요예산안 검토 및 기준 마련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평가 시 관련 기준 정립

-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등 가이드라인 및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사·
평가 매뉴얼 개발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방안

- 他 규제샌드박스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분석 및 모빌
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차별화 방안

② 모빌리티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국내·외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산하 **지원센터 운영 사례 조사**
 - 법적 근거, 유형, 운영기간, 조직구성, 운영예산 등
 - 국외 모빌리티·교통과 관련한 정부 사업지원 조직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역할 수행 조직 등 조사
- ‘**모빌리티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비전, 목표 정립 및 운영전략 수립
 - 지원센터 단계별 운영 로드맵 수립
 - 지원센터 운영조직 설계 및 인력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방안 제안
 -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등 직무기술서 작성, 업무 추진 체계 마련
 -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 마련
 - 지원센터를 통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창업·운영 지원 및 활용 방향,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방안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③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책 제안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등 제시
-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점검) 연구기간 동안 과제담당관(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가 1명과 공동으로 1회 이상 연구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 * (주요 점검사항)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계약 내용의 충실성, 일정 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격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10절	10부	
중간보고서	10절	10부	
최종보고서(안)	10절	10부	
최종보고서	10절	30부	
최종보고서 요약본	10절	30부	
최종보고서 파일	USB	2개	

III 과업 추진계획(예정 공정표)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세부 추진과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정립						
② 모빌리티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③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책 제안						

IV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학계,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른다.
- 참여연구진은 발주처와 협의 선정하되, 발주처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연구계획(안)에 따라 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등급 이상

-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세부사항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도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글·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7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윤리점검기준'을 숙지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및 종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연구성과품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9 -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3. 설계변경의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가 변경되거나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8 -

V 보안대책

-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 공개 및 이용이 가능하다.
- 6)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하도록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8)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에 대하여는 “대외주의” 대신 “대외비”로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0 -

- 9) 용역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등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 등이 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0)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보안책임자 관리하에 철저히 파기하여야 한다.
- 11)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12)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필요한 부수로 발행을 최소화하고,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행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14) 과업비밀 및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15)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6) 과업 수행 중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결정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대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제안 참가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작성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지 규격 30매 이내로 작성하고, 전자문서(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서류에 대해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파일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마.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담당과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 연락처 : (044) 201-3838, 3862

VII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1.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 업체 선정

2.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1. 기술평가(80%)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과업 수행 능력 (100)	과업 수행 방법	30	비계량
	과업 수행 계획	30	비계량
	사업 관리	20	비계량
	기타	20	비계량
합 계		100	

○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다소 미흡 (70%)	미흡 (60%)
과업 수행 방법(30)	30	27	24	21	18
과업 수행 계획(30)	30	27	24	21	18
사업 관리(20)	20	18	16	14	12
기 타(20)	20	18	16	14	12

나.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붙임 1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권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권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개인용 표지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중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계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계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붙임 2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지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재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계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양적/질적 주중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관례·법령을 인용할 때, 관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㉔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설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설명을 밝혀야 함
- ㉑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㉒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 ㉑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㉒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 ㉓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 ㉑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㉒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인문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㉓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키펀더, 이우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와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㉔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㉕ 선행 연구의 소개(칼럼),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얼마 뒤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붙임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3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증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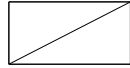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과업제안 관련 서식 모음

[별지 제6호 서식]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업무일지(예)

년·월·일	관리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작업구분 (초안, 임·출력, 복사, 파기 등)	비밀등급	제목	건수(매수)	작업담당	수령자		폐지처리		결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과업제안서

용역명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업체명 : (인)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p>◎ 주요연혁</p> <p>◎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자산</td><td></td><td></td><td></td><td></td></tr> <tr><td>자본</td><td></td><td></td><td></td><td></td></tr> <tr><td>부채</td><td></td><td></td><td></td><td></td></tr> <tr><td>부채비율</td><td></td><td></td><td></td><td></td></tr> <tr><td>매출액</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연구진(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업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요 경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3.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발주기관 확인 필) 반드시 첨부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انش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과업 제안서 등 제출 서류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 1 활용)
 - 제안서 내용(A4지 규격, '아래한글' 활용하여 작성)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양식 2 활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양식 3 활용)
4.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 4 활용)
5. 첨부자료(관련 증빙자료)